

[별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1.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분 야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환경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주도 신속한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으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국제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산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진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5% 목표는 탄소 무역장벽 국제 질서에서 낙오할 것이 분명해 전면 수정 불가피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5년 60%로 설정함 2.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지와 바다 포함 국토의 1.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함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정함 3. 10년간 500조원 규모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진행함 •에너지전환부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한국전력 포함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업무를 담당토록 함 4. 성인 1인당 500만원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500조원 재원 중에서 2035년까지 성인 1인당 500만원을 재생에너지 바우처로 지급함 •바우처의 용처는 전기차 구매,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투자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용도로 한정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1.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분 야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환경
<p>5.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제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탄소세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6~1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함 <p>6.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생태사회 실현에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 <p>7. 탈핵 로드맵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중단 등 탈핵 로드맵을 구축함 •탈핵에 이르는 동안 핵발전소 안전체계를 대폭 강화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10년간 법과 제도를 정비와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를 진행함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조원 재생에너지 투자 및 바우처 지급: 정부가 기후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조달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2. 디지털 산업 혁신	분 야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재정경제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주도의 조속한 디지털 산업 전환 •첨단·원천 기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혁신경제 조성을 위해 지대추구 경제를 규제하고 혁신친화적 조세체계를 도입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반도체 생산 역량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생산 역량을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비메모리 A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제조, 소재·부품·장비 등 종합 반도체 생산 역량으로 발전시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외 비수도권 4개 권역에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함 2.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AI+X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에 AI 기술을 응용하는 R&D와 산업 적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3. 한국형 DARPA '한국기초원천연구원' 설립과 공공 R&D 혁신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국방고등과학연구원(DARPA) 모델을 적용한 한국기초원천연구원을 설립하고, 단기 기술이 아니라 유망하고 도전적인 장기 첨단·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함 •공공 R&D 수행시 실패 사례를 포함한 전체 과정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연구아카이브를 구축해 학습 효과를 제고함 4. 미래혁신기금 조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 공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채권(500조원)과 함께 미래혁신채권(100조원)을 발행해 미래혁신기금(600조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태양광-풍력 발전,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부문에 집중 투자함 •미래혁신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기금의 투자는 국민 지분권을 설정하고 투자 수익을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배당함(기후채권 재원의 투자 수익은 '햇빛바람연금'으로 배당)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2.디지털 산업 혁신	분 야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재정경제
<p>5. 재벌·대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규제로 혁신 경제 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분할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사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으로 대주주의 불공정한 지배권 강화를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함 •콜옵션 전환사채(CB)와 전환사채 파생상품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제해 재벌의 신종 '세금 경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함 •카카오, 쿠팡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규제함 •원청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항력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 강화, 유통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가맹점주 보호 강화 등 <p>6. 혁신 경제를 위한 조세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사 자사주 매입액의 1~2%를 기업투자 촉진세로 부과함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정상 시행하고 소득공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인하함 •탈탄소 전환을 위해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6만~12만원의 탄소세 도입함 •부동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공시가격의 0.5~1.0%의 토지세 도입함 •은행의 이자수익 초과이득에 대해 50% 세율로 상생연대기여금(은행 횡재세) 부과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법령의 제·개정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자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혁신기금: 정부 발행 기후채권과 미래혁신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 •기타 정책들의 자원: 혁신 경제를 위한 조세 개혁으로 충당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3.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분 야	재정경제·보건복지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폭등, 임금 감소 등 국민의 고통을 다양한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 • 투자수익에 대한 국민이 지분권을 갖는 산업 혁신 공공투자, 기본소득 배당과 연계된 조세를 적극 활용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 <p>○ 이행방법</p> <p>1. 햇빛바람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기후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500조원 규모)의 수익을 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으로 지급함 -태양광 협동조합 가입 주민에게 1인당 연 150만원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 모델을 변형해 전국화함 <p>2. 디지털 혁신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미래혁신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100조원)의 수익을 국민에게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지급함 <p>3. 탄소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탄소세 도입. 세율은 탄소배출량 톤당 6만~12만원 •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1인당 5만~10만원 배당 가능, 탄소배출량 축소에 맞춰 배당액은 감소 전망) <p>4. 토지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시지가 대비 0.5~1.0%의 세율로 토지세 도입함 •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1인당 5~10만원 추정)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3.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분 야	재정경제·보건복지
<p>3.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0세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p>4. 농어민 기본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농어민기본소득법 지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재정 부담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빛바람연금·디지털혁신연금: 각각 정부 발행 기후채권과 디지털혁신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하여 조성한 미래혁신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마련 •탄소배당·토지배당: 각각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마련 •청년첫출발기본소득·농어민기본소득: 증세를 통한 정부 재정으로 마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4. 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	분 야	보건복지·재정경제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국민 부담 완화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주치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청소년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0~12세 어린이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해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 2. 국민 간병보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제를 도입하고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증 입원환자에는 간병 서비스 제공 •간병비보험에 기반해 지역사회 가정형 간병이 통합된 공공간병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3. 1000병상 이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및 공공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증축, 중소병원 통합 등의 방법으로 1,000병상 이상 규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4. 공공의사 면허제와 개원면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도입, 공무원 의사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함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의사로서 진료 권한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5.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2026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공급해 2035년까지 100만호 공급함 •저가 건축을 지양하고 3~4인 가구 살 수 있는 전용면적 66~85㎡ 사이 공공임대주택 확대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4. 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 공성 강화	분	야 보건복지·재정경제
<p>6. 토지임대부 분양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50만호, 2035년까지 100만호의 주택을 공공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고 상가와 산업단지 등으로 토지임대부 방식 확대 <p>7.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범위를 제한함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현재 12%) 지급 의무 부과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 부여 <p>8. 사교육 부담 없는 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연합국립대 설립과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실시 •입시 경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경로별 입시를 강화 •비정규직 교수들의 안정된 일자리에서 연구 전념하는 학술교수제 도입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2.2% 수준으로 높이고 대학교육 점진적 무상화 <p>9.교통과 통신요금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서비스에 대해 30G 데이터 제공 기준 월 4만원 이하 보편요금제 도입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이용권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무료이용권 확대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분야: 간병비보험료 도입, 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의무 준수 등 •기타 분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5.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소외 해소	분 야	보건복지·재정경제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축소를 통한 국민의 이자 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서민의 금융 복지 확대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조원 소상공인재생기금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을 설치함 •새출발기금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함 2. 은행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은행의 이자수익 중 과도한 초과이득에 대해 50% 세율로 은행 횡재세를 부과함 •은행 횡재세 세수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 3. 3%대 이자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3%대 이자로 1,000만원 신용대출 시행 •기본대출을 전담 공공은행 설립하고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통해 대출 자원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축소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높은 위험도 적용, 주담대 축소시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비례해 높은 금리 적용함 5. 개인 파산·회생 제도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산·회생 채무자에 대한 취업제한 폐지하고, 당면복권 경과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 •개인회생 절차에만 도입돼 있는 중지명령제를 개인파산에도 도입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채무조정: 주로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 •기본대출: 한국은행 특별대출, 정부는 미상환금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6.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분 야	노동·안전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권과 인권을 제고함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3일 휴식제(주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2030년까지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주 6시간 상한으로 단축함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3.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감 배정, 계정 정지, 수수료 등 단가 결정, 등급·평점의 설계 및 작동 방식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시 플랫폼 기업에 노동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손배·가압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포괄적 권익 보호를 위한 쟁의행위를 합법 쟁의로 인정함 5.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별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이 지역 동종업종 전체에 적용되도록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함 6.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강화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6.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분 야	노동·안전
<p>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고용형태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p>8. 사형제 폐지와 평시 군사법원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최고형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함 •군사법원은 전시에만 운영하고, 평시 모든 군대 내 형사사건은 민간 사법기구가 담당하도록 함 <p>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탈시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주택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p>10.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권법 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함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함 <p>1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로 전환함 <p>12. 난민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심사 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지원을 대폭 강화함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확충으로 심시기간 동안 생계비 및 주거 지원 확대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7.성평등·돌봄사회 실현	분 야	여성·보건복지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일자리와 고용, 가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사회 구축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실현해 사회 재생산 위기를 극복 <p>○ 이행방법</p> <p>1. 성별 임금평등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비율, 성별 승진 상황 등을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함 •고용노동부에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p>2. 성평등한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확대와 소득대체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함 -1년간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남은 6개월은 90%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소득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한액을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함 •엄마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개월 이하 영아 돌봄 육아휴직의 아빠 6개월 이상 참여시 부와 모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100%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급여 상한액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기간에 따라 첫 1개월 300만원에서 마지막 6개월 550만원으로 상향함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출산전후 1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고 의무화함 •한부모 가정의 경우 1년 6개월 육아휴직 전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직급여 상한을 50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불이익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리한 처우’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을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대상으로 하여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함 <p>3.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의 ‘양형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재정립함 •국가가 불법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 •인터넷범죄 국제조약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모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7.성평등·돌봄사회 실현	분 야	여성·보건복지
<p>4. 친밀한 관계 성폭력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 폭력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적용함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인소추제도와 변호사 부대공소제도를 도입함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범죄, 교제 폭력에 대해 피해자 신변보호 범위를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고, 반의사불범죄 규정을 폐지함 <p>5. 권력형 성범죄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간죄, 추행죄의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당사자 동의 여부'로 변경함(비동의 간음죄·추행죄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함 •국방부 내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로 군대내 성범죄 대응을 강화함 <p>6. 생활동반자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율할 법률을 제정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혼인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에서 혼인·혈연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 <p>7. 여성의 온전한 임신중지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명시함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히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전면 적용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8.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분 야	정치·사법윤리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원성 강화를 통한 정치의 생산성·역동성 회복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소권심사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공소권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대표로 구성된 공소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당부를 감독 •공소권심사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를 명할 수 있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 취하를 권고할 수 있음 2. 수사-기소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구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함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수사 지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3.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제도와 변호인 공동참여 기소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폭행, 가택침입,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함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공소참여인으로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함 4.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등 주요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 •경찰위원회 내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인권침해 조사와 감독, 구제, 교육 담당 5. 대법원·헌재 개방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사법시험 비합격 전문가 등도 대법원 판사, 헌재재판관에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8.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분 야	정치 • 사법윤리
<p>6. 노동법원·인권법원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과 인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로 노동권과 인권의 강화를 도모함 •재판 과정의 녹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판결서 공개를 대폭 확대해 사법 과정의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함 <p>7.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강화와 국회의원의 특혜·특권의 폐지·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석을 400명까지 증원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강화와 함께 의정활동과 무관한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은 대폭 축소·폐지하고, 세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함 <p>8. 선거연합정당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 단일 연합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법상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의 의석할당정당으로 취급하여 배분함 <p>9. 민주주의 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정치후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직선거당 1만원 추가) 바우처를 모든 유권자에게 지급함 <p>10. 정당 활동과 정치선거운동의 자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폐지함(지역당 설립 가능)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정치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9.한반도 평화와 균형·실리 외교	분 야	통일외교통상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결주의적 대북 노선을 전환해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막고 평화체제를 실현 •‘가치 외교’에서 ‘평화·균형·실리 외교’로 전환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19 남북군사합의서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9.19 군사합의서를 복원함 •북에 9.19 군사합의서 복원을 위한 고위급 대화 제안부터 시작함 2. ‘가치외교’ 노선에서 평화·균형 외교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패권 전략에 대한 일방 추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 •외교 기조를 평화·균형·실리 외교 기조로 전환함 3.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중간단계 목표를 ‘북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과 한미 핵안보협력 수준의 현재 상태 동결’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략적 목표로 유지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목표를 북의 핵무기 수준과 한미 핵무기 협력의 현단계 유지로 설정함 -미국은 24년 3월 6일 현재 한반도 비핵화 중간 단계 조치를 위한 대북 대화 제안 4. 긴장 고조 한미 군사훈련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B 전략폭격기 동원, 북 지휘부 제거 등 북의 공포와 긴장고조 대응을 유발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함 •9.19 군사합의서 복원 등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프로세스 가동과 연계하여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빈도, 강도, 규모를 조절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9.한반도 평화와 균형·실리 외교	분 야	통일외교통상
<p>5. 국제분쟁 개입의 평화적·인도주의적 원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분쟁 지역(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무기 수출시 국회 동의권 신설 •전쟁이 아닌 국내 반인도적 범죄 정부(예, 미얀마)에 대한 수출과 통상 규제 강화 <p>6. 모병제 전환 공론기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전략적 안보의 강화, 한반도 평화 기여, 군인 인권의 개선, 성평등과 사회적 평등 제고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모병제 전환을 검토함 •모병제 전환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여 타당성, 방법, 사회적 부작용 방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함 <p>7. 영토조항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가 2국가 체제임을 인정하되 평화와 통일 지향을 담아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함 •‘대한민국의 영토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선 이남 지역으로 한다’로 개정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 공론화 시작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무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10.헌법 개정	분 야	정치 • 사법윤리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헌정체계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 시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함 • 직접·참여·의회민주주의, 인권·기본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함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핵 촛불운동을 포함함 2.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 3.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독립 헌법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대상 법률을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로 제한하고, 친인척에 대한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감사원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함 4. 직접·참여 민주주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숙의형 민주주의 장치로서 '시민의회' 도입하고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공론 조직과 운영 역할을 담당토록 함 •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해 배심제·참심제 등 국민참여 재판의 헌법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의 확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수정하고(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가 예산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 기본소득 등 적극적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제사회 정책들의 위헌성을 없앨 수 있도록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에 더해 토지, 지식 등을 사회적 공유자산으로 하는 조항을 도입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새진보연합		
제 목	10.헌법 개정	분 야	정치 • 사법윤리
<p>6. 인권과 기본권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더해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확장함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생태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설정함 •국민의 근로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 조건 개선에 국한된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권익 보호'라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함 •형사 피고인에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 구속·체포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에 추가함 <p>7.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장 조항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라고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영장청구의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 <p>8.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원칙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석 할당이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비례대표제를 명문으로 규정함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 시작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무관 			